

이슈브리프

No. 2025-30

최근 북한의 재래군사력 건설과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의 영향

차두현

부원장

2025-09-16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군사위협과 관련하여 주로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핵전력이었다. 북한은 2006년의 10월 이후 6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능력을 고도해 왔고, 2020년대에 들어서에는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둔 전술핵 능력과 다양한 투발 수단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2~3년 전부터는 핵전력과 함께 재래전력 현대화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금년 1월 신형 전차인 '천마-2호'를 이용한 전차전 훈련을 공개했고, 3월에는 김정은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전략원잠)'의 건조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 또한, 금년 4월과 5월에는 각각 '최현호'와 '강건호(최현급 구축함 2번함)'로 명명된 만재 배수량 5,500톤급 내외의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가졌다. 북한의 재래전력 건설은 2021년 당시만 해도 무인기와 정찰위성 등 미래전을 대비한 '선택과 집중' 차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점차 그 투자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외형과는 달리 북한이 건설한 신형무기들이 실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의 신형전차와 잠수함, 구축함은 모두 성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핵심 장비의 장착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러 밀착으로 인해 경제적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평양이 이들을 작전배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급속한 재래전력 건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2년의 단기간 내에 우리

의 질적 우위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의 재래전력 증강은 실제 성능 이상으로 대외정책상의 메시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것의 파급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재래전력 건설을 통해 핵 무기를 실제 사용 가능한 태세가 갖추어졌음을 과시하려 하고, ‘원양작전함대’ 건설을 공언함으로써 이제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 및 지역 차원에서 존재감을 가지려 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재래전력 증강을 통해 미중 전략경쟁 및 강대국 간 거래에 있어 북한의 효용 가치를 과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북러, 북중, 그리고 북미 협상에 있어서의 카드를 강화하려 하는 한편, 우리에게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향후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 역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과도한 긴장을 관리하고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 자체의 논리적 속성상 북한은 향후에도 ‘두 국가’보다는 ‘적대’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일단은 확실한 대북 억제 능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 재래군사력의 추격을 고려한 우리 전력증강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한미 핵·재래전력 통합억제태세(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CNI) 구축, 한-미-일 안보협력의 유지 및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하여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의 부담 분담을 확대하는 대신 전술핵 재배치 등의 실물적 확장억제 조치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재래전력 건설: 공언과 실제

1. 주요 재래전력 건설 현황

2011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의 군사력 건설은 주로 핵능력의 발전과 미사일 전력 강화에 집중되었고, 재래전력 면에서는 주로 노후화된 기존 무기 및 장비들을 대체하거나 특수전 전력을 증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¹ 이는 경제력의 한계로 인한 북한판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볼 수 있었고, 북한은 오히려 한국의 재래전력 현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써² 재래전력 건설 능력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2021년 1월의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의 재래전력 건설방향은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은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업’으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km 사정권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고체 연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개발 등 핵전력 분야와 함께,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km 전방 중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등의 일부 재래전력 현대화 계획도 천명했다.³ 이는 재래전력의 낙후에 따른 핵전력과 재래전력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능력을 부분적으로라도 구비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군사전문 분석기관들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주력 전차(Main Battle Tank, MBT)는 대부분 2세대 전차에 속하고(일부 1세대 전차도 존재), 전투기 전력은 2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대 내외로 보유한 MiG-29(미코얀 MiG-29, Fulcrum)가 최신형에 속한다. 해군력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연안방어급 함정이다.⁴

2023년 이후 북한의 재래전력 건설은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났다. 2023년 9월 북한은 “첫 전술핵공격 잠수함”이라고 자평한 ‘김군옥영웅함’을 진수했고,⁵ 2024년에는 사격통제장치와 생존성이 증대된 3세대 전차 ‘천마-2호’의 실전연습을 공개(이는 이 유형의 전차가 작전배치되었음을 의미한다)했다. 금년 4월과 5월 ‘최현급’ 구축함 1번함 및 2번함을 진수하는 한편, 2026년 10월까지 3번함을 건조할 것을 선언했다.⁶ 금년 3월에는 김정은이 신형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⁷ 미 국무부의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비는 2019년 불변가를 기준으로 43억 1000만 달러이며, 이를 구매력 지수로 환산해도 110억 달러 정도이다.⁸ 우리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건조비용이 1조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북한의 인건비나 기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견하는 5,000톤급 내외의 구축함 건조 비용에는 북한 역시 억대 달러 단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모의 함정을 2년 내에 3척 이상을 복수로 건설하는 것은 무리한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전략원잠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1,800톤급/프로젝트 633형 잠수함)의 최소 2배 이상의 배수량을 갖고 있으며, ‘최현급’ 구축함 2척 역시 프리깃함(frigate/호위함)이 주력이던 북한의 해군력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전력 증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물론, 잠수함과 신형 구축함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집중투자를 고려하면 전술핵 무기 투발을 위한 플랫폼으로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핵전력 고도화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축함과 신형전차는 굳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재래전력 차원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근래 북한의 군사력 건설 현황은 핵능력 일변도의 과거 추세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제기되는 의문들: 자원 마련과 실제 성능

문제는 과연 북한이 이러한 압축적 재래전력 증강을 실천에 옮길 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2024년까지 10년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의 3.9% 2023년의 3.1%를 제외하면 미미한 실정이고, 2015년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해였으며, 특히 COVID-19의 여파가 미친 2020년~2022년까지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부진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¹⁰ 2023년부터 북중 및 북러 무역이 재개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의 투자액을 갑작스럽게 대폭 늘이기는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金正은이 지방경제발전을 통한 민심 수습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민생활을 무시하고 무작정 제2경제(국방경제) 일변도로만 경제를 운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연 북한이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형적인 재래전력 증강에 몰두한다면 이는 당연히 성능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2023년 7월의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했고, 2024년 3월 훈련상황을 공개한 ‘천마-2호’ 계열의 전차는 위협물체를 사전 탐지하여 무력화하는 능동방호체계(Active Protection System, APS)와 유도탄 탑재 기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이러한 성능이 실제로 전투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석가들 간의 논란이 되고 있다.¹¹ 비슷한 논란은 북한이 금년부터 진수한 ‘최현급’ 구축함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최현급’ 구축함은 외형상 각종 미사일 탑재 능력과 현대식 레이더 감지 시스템을 갖춘 현대형 함선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능들이 진수 단계부터 탑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5월의 진수 과정에서 좌초한 ‘강건호’의 사례는 선체의 무게중심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강건호’가 3주 만에 재진수된 사실 역시,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 내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함선 자체가 완전한 기능이나 무장을 갖추지 못한 경량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특정 체제의 군사력은 단순한 군수공업 능력뿐만 아니라, 민간 산업의 발전 수준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전차의 능동 방어체계 구축과 신형 함선의 건조를 위해서는 그만큼 뛰어난 금속, 전자, 조선 분야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이것이 민간의 상품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분석 대상이 되는 함정이나 전차의 기술이 민간 분야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조선의 경우 북한이 5,000톤급이 넘는 민간함선을 건조한 경험

역시 축적되지 않았다. 북한이 외형상의 재래전력 증강에 걸맞은 내실을 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주된 이유이다.

3. 북러 밀착은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북한이 자체 능력만으로 재래군사력을 현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그 다음 선택지는 신뢰할 만한, 그것도 중기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을 제공할 지속 가능한 후원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외형상 북한은 2023년부터 가속화된 북러 밀착을 통해 그 답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6월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은 북러 간에 무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식적 근거를 제공했고, 이론적으로는 양측 간의 핵기술 거래도 가능하다. 북한이 5000톤급으로 기존의 ‘김군옥영웅함’보다 큰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점은 핵미사일 기술은 아니더라도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설계 및 일부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¹² 러시아가 이 거래를 주저하더라도 평양은 그러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이나 부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래전력 증강과 관련된 대북 지원은 충분히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2023년 11월 이후 북한이 제공해온 10,000여 명 이상의 병력(추가 병력까지를 합할 경우 30,000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었고,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및 탄약 공급 역시 절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기 공급국으로서의 북한의 가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지역 및 세계차원의 영향력을 보장해 온 주요 원천 중 하나는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 능력이었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해 고갈된 무기 재고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생산력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전력 증강을 지원할 동기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2~3년의 단기간 내에 남북 간의 재래군사력 균형을 무너뜨릴 만한 변화를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은 군사력 건설의 재원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제원조, 최신형 재래무기의 공급, 북한의 러시아 국방공급망 편입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경제지원의 경우 러시아가 연 수십억 달러 이상을 꾸준히 북한에 제공해야 하지만, 스스로도 국제제재를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내 강제병합지역 전

후 복구 및 국내 경제회복 소요에 직면한 러시아가 이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신 무기체계 공급의 경우 가격도 가격이지만 다른 국가와의 계약, 전쟁으로 인한 고갈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만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첨단 무기를 공급하기도 어렵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특정 무기체계의 라이선스 생산(면허 생산)을 맡기는 경우, 러시아의 무기 제고를 회복하고 북한에게도 외화벌이 수단이 된다는 이점이 있지만, Su-47 전투기(수호이 Su-47/러시아 개발 실험 전투기)나 T-14 전차(T-14 아르마타/러시아 3.5세대 주력 전차)와 같은 최신형 무기를 공급하기에는 북한의 경험이 여전히 부족하고,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평양과 모스크바 모두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북한을 자국 국방생산망의 일종의 하청체로 인식하여 주로 최첨단의 한두 단계 아래 수준에 속하는 무기의 공급을 맡기려 할 것이나, 북한은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습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체 방산 부문의 첨단화와 활성화를 기도할 것이다.¹³

이를 고려할 때, 북러 밀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재래전력이 의미 있는 현대화를 달성하기에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핵전력에만 치중한 전력의 건설은 결국 다양한 군사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되고, ‘핵 그림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 지역에 타격을 주거나 점령이 가능한 재래군사력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함정과 육상 재래무기 분야에서 러시아의 설계나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고, 전술핵무기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각종 무기체계를 러시아로부터 도입함으로써 핵기술 협력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중동 지역의 전략적 주요 거점이었던 시리아에서 영향력이 위축되었고, 이란의 경우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인해 지원 여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러시아로서는 북한이라는 협력자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 수준은 북한의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핵기술 거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재래전력의 경우에도 북한에만 모든 것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에는 다소 방관적 자세에 있기는 하지만, 북러 간의 군사적 밀착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국 역시 견제 심리를 발동하게 될 것이고, 이 역시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에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래군사력 증강은 분명 경계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나친 과대평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재래전력의 대외정책상의 함축성: 한반도를 넘어서는 북한

북한의 최근 재래전력 증강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던지는 대외정책상의 메시지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북한은 재래전력의 증강을 통해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2022년 9월의 『핵무력정책법』이 핵무기의 임의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였다면, 재래전력 증강은 전쟁 초반부터 핵무기를 다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만약 핵능력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재래전력이 여전히 낙후된 상태에 있다면 북한은 핵 사용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재래보복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일부 지역을 점령하거나 타격한 이후 핵 사용 위협을 가하는 등의 ‘핵 그림자’ 시나리오도 초반부터 실행이 어렵게 된다. 한국과 미국의 재래전력에 비해 지나치게 낙후되지 않는, 특히 무인기 등의 미래전 대비 전력에 있어서는 일정한 추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국에 대한 다양한 군사행동이 가능하다. 즉,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하에서 동일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의 심리적 부담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년 9월 11일과 12일, 김정은은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내년 초로 전망되는 9차 조선로동당대회에서 “핵무기와 상용(재래)무기의 병진”을 선언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¹⁴ 이 역시 언제든지 핵무기를 실제 사용 가능한 태세를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재래전력 증강, 특히 해군력 강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벗어난 역할과 의지의 표명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025년 4월 개최된 ‘최현호’ 진수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원양작전함대’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그 명분은 “핵위협이 동반되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사시 적 해외 무력의 조선반도 무력 증강 기도를 구속하고 차단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세계의 그 어느 수역에든 진출하여 적수국들의 침략을 주동적으로 견제하고 선제 또는 최후의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건설”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라는 점도 언급했다.¹⁵ 이제는 북한 군사력이 활동범위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 외-지역에서도 발휘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탄약 및 미사일 등을 공급함으로써 이 전쟁에 개입했고, 작년 11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 군사력을 투입함으로써 우크라이나군이 일시 확보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러시아가 탈환하는 데 힘을 보탰으며, 전체적으로 30,000명에 가까운 병력을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⁶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의 개입을 통해 북한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과 세계 차원의 불안요인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에 있어 북한은 미국의 정책을 가장 강도 높게 비난한 체제 중 하나였으며, 향후 지역 분쟁에서 지원 세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있어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상당한 잠재적 가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대국 간 각축에서도 북한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2024년의 조약을 통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복원한 북한은 이 동맹이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과시했다. 앞서 언급한 ‘원양작전함대’ 목표가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북한군의 활동반경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은 결국 북러 동맹이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 혹은 글로벌 동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점령지역을 확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동 및 여타 지역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이 약화될 위험에 처한 러시아에게는 북한의 이러한 접근은 적지 않게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중국 역시 비슷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견제를 위해 중국 중심-연대(coalition)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 등의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호응하여 전력을 지원하거나 다른 곳(한반도)으로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존재와의 협력은 매우 긴요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적 역할의 부각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쟁적인 구애를 받는, 과거의 중소 등거리 외교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는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벗어난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이 한반도를 벗어난 외교적 기동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위상을 바탕으로 ‘불변의 주적’인 우리의 역내 소외를 유도하는 한편, 미국과의 직거래 관계 구축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은 중국의 전례 없는 환대를 받는 한편, 시진핑(习近平,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천안문 망루에 섰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反미/反서방 연대의 일익을 담당하는 북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은은 일약 ‘글로벌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¹⁷

셋째, 북한의 지역 및 글로벌 역할의 강화는 대내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은 단순한 동아시아 변방의 실패한 체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급 행위자이자 지역 강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김정은 연설이나 각종 매체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세계전략을 가장 강력히 비판함으로써, 이제는 세계적 이슈를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노력해왔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지역적 군사활동의 잠재적 가치를 부각하는 평양의 의도가 성과를 거둘 경우, 북한은 북-중-러 3각관계의 열등한 파트너(Junior partner)로서가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3각관계를 함께 견인하는 존재로서의 위상도 은근히 부각할 수 있다. 즉,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부터 지향한 ‘강성대국’의 목표를 명실상부하게 구현한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려 할 것이고, 이는 오는 10월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와 2025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회의 최대 선전 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대응 방향

북한의 최근 재래전력 증강이 지닌 함축성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정책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라는 기존 한미동맹의 공통목표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반도를 벗어난 동맹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북한이 지역 및 세계 차원으로 시각을 넓힌다는 것에 단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한미동맹의 장기적 생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접근은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지역 및 글로벌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확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이루어져왔지만,¹⁸ 노무현 정부의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에서 이후의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의 지역 및 글로벌 차원 역할은 수사적인 차원에 머물러왔다. 이는 북한 핵 개발 등 한반도에서의 위협 요인이 급격히 증대함에 따른 결과이기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defend)” 동맹이라는 인식을 강화해온 요인이기도 했다.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격상시키는 한편, 아시아의 다자 안보 협력체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확장과 관련해 지역 분쟁에의 연루(entrapment) 위험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동맹의 한반도 고착화에 따른 방기(abandonment)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를 벗어난 동맹의 역할 확장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

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사고를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대만 해협 위기 등의 각종 지역 분쟁에 있어 우리가 어떤 외교 및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의 대안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¹⁹

둘째, 단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급속한 재래전력 증강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질 우위의 한국, 양 우위의 북한’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전력의 질 면에서 대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방개혁』 및 『국방혁신』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 현대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요 전력 체계에서 북한보다 한두 세대 앞서야 하고, 이는 곧 적정 국방비 확보와 연결된다.

또한, 우리의 기존 전력증강에 있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의 조기 완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실물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핵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3축체계’ 관련 전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3축체계’에는 조기 경보 및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정보·감시·정찰,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ISR), 그리고 다양한 타격수단이 포함되므로, 이는 북한 재래전력 증가에 대한 우리의 우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북한의 재래전력 증강은 결국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좁혀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연결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남북 간의 과도한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창구를 복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조급성으로 인해 한미공조가 흔들리는 상황은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변함없는 한국과 미국의 공통 목표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재래전력 증강에 대한 한미 연합 차원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이 다소 양보하더라도 조기 미북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한국이 바란다는 인상을 피할 필요가 있다.

저자

차두현 부원장은 북한 문제 전문가로서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정치·군사, 한·미 동맹관계, 국가위기관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2005~2006), 대통령실 위기정보상황팀장(2008),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2009)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교류·협력 이사를 지냈으며(2011~2014) 경기도 외교정책자문관(2015~2018),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2015~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2017~2019)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겸 수석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국제관계분야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저서 100여건이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¹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pp. 19-30.

² 김보미, “북한의 한국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한 비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제263호 (2021. 5.25), pp. 1-2.

³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노동신문』 (2021.1.9).

⁴ IISS, *Military Balance 2023* (London: IISS, 2023), p. 209; pp. 262-264. 주력 전차의 세대 구분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도입이 시작된 초기형을 1세대, 사격 정확도가 향상되고 야간전투 등이 가능한 수준을 2세대, 사격통제장치의 자동화와 복합장갑 등이 채택된 유형을 3세대, 1990년대 이후 초반 이후 도입되어 C4ISR 연동과 이동 사격 등이 가능한 수준을 3.5세대 전차로 간주한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의 K-1A 계열 전차는 대부분 3세대, K-2 전차(흑표)는 3.5세대에 속한다. 전투기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제트 엔진 전투기들을 1세대, 1950년대부터 설계되어 196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 활약한, 레이더가 장착되었고 후퇴익 혹은 델타익을 채용하여 초음속을 실현한 기종을 2세대, 1960년대~1970년대부터 설계되어 원거리 비가시 전투(Beyond Visual Range, BVR) 개념이 도입된 전투기로 초음속 속도가 더욱 빨라진 기종을 3세대로 분류한다. 1980년대부터 설계되어 1990년대~현재까지 활약하고 있는, 전자장비의 발달로 디지털화가 이루어졌고, 지상공격 및 공중공격 기능을 동시 보강한 다기능 항공기는 4세대, 이후 스텔스, 전자동 제어가 가능한 기종은 5세대로 간주한다.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중 최신에 속하는 소수의 Mig-29(나머지는 대부분 3세대 이하)와 우리의 F-16 계열이 3~4세대에 속하고, 우리의 F-15K는 4세대 중에서도 최첨단이라 할 수 있으며, F-35는 5세대에 속한다.

⁵ 북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김정은 진수식 참석,” 『연합뉴스』 (2023.9.8).

⁶ “북한 ‘내년 10월 10일까지 5천t급 신형 구축함 추가 건조,’” 『연합뉴스』 (2025.7.22).

⁷ "김정은 핵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 '핵강국 사명 수행'," 『朝鮮日報』 (2025.3.10).

⁸ U.S. Department of Stat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2021 Edition," <https://www.state.gov/world-military-expenditures-and-arms-transfers-2021-edition> (최초검색일: 2025.03.02.)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 국방예산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437억 달러로 북한의 4~10배에 이른다.

⁹ "덩치 키워 '핵잠수함' 만든다는 북한...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 『연합뉴스』 (2025.3.8).

¹⁰ 통계청, 『2024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24), p. 101.

¹¹ 이에 대해서는 "로켓 날아오자 광...北신형전차, 우리 '흑표'에도 없는 요격무기가?," 『조선일보』 (2023.8.6); "북신형 전차, 김정은 자랑대로 '세계 제일 위력한 탱크'일까," 『한겨레 신문』 (2024.3.24) 등을 참조할 것.

¹² "덩치 키워 '핵잠수함' 만든다는 북한...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 『연합뉴스』 (2025.3.8).

¹³ 차두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군사력 발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KDI 북한경제리뷰』, 제27권 제3호 (2025.3), pp. 12-14.

¹⁴ 김정은, 신형무기 개발 시찰..."내년 당대회서 병진정책 제시," 『연합뉴스』 (2025.9.13).

¹⁵ "북한, 5천t급 신형 구축함 진수...김정은 '원양함대 건설'," 『연합뉴스』 (2025.4.26).

¹⁶ "North Korea to send as many as 30,000 troops to bolster Russia's forces, Ukrainian officials say," *CNN* (July 2, 2025).

¹⁷ "Kim Jung Un Shifts Image to Global Player from Isolated Pariah," *Bloomberg* (September 2, 2025).

¹⁸ 이에 대해서는 Jonathan D. Pollack, Young Koo Cha, et al.,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The Future of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 KIDA-Rand Joint Project Report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1995) 참조.

¹⁹ 7월 31일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의 공보에서 미 국무부가 주요 논의 의제로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를 부각한 데 비해 우리 외교부의 자료에서는 이 표현이 빠졌는데, 이는 여전히 지역분쟁 관련 기여에 소극적인 우리의 입장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서는 U.S.

Department of State, "Secretary Rubio's Meeting with ROK Foreign Minister Cho," Press Release (2025.07.31);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회담 상세 보기," 외교부 (2025.7.31) 참조.